

# 반도체, 하강 사이클 보다 中 추격이 더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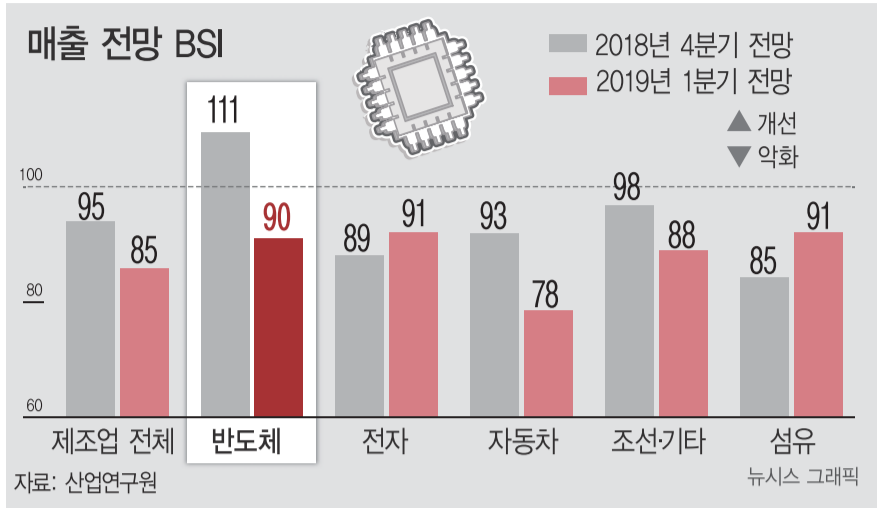
## R의 공포

### ③ 반도체까지 드리운 그림자

中, 이미 디스플레이·폰 추월 5년 후 반도체 시장도 위협 GDP 2.6%→2.5% 하락 우려 한국, 특정 산업 의존도 높아

# 반도체 부품업체 A사. 지난해 반도체 호황덕에 그나마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걱정이 많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 업체 최고경영자 A씨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약 545조원)로, 지난해(4770억달러)보다 2.6%(가트너)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있다. 그렇다고 선뜻 투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 걱정이라고 했다.

위기속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3%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작은 개방경제)’라는 한계 때문에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해 2018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0년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와 동떨어져 나홀로



강한 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갈수록 기업들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

### ◆반도체 사이클 하강

1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5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0조4262억원(삼성전자 10조8000억원, LG전자 753억원)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들 영업이익은 2017년 4분기(32조8557억원)보다 7.4% 하락했다.

영업이익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1분기 105곳의 영업이익의 합계는 33조7316억원으로 작년 1분기(36조9553억원)보다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8.4%,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동력인 제조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19년 10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문제는 경쟁력 약화로 주요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의 경우 5년 후면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제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40% 수준에서 최근에는 60%대로 치솟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주요 산업의 2019년 설비투자율과 수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설비투자 상위 10개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의 6.4%보다 낮은 2.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출 상위 9개 산업의 2019년 수출은 올해보다 3.0% 증가하는데 그쳐 2018

년의 5.7%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둔화를 우려한다. 소시에티제너럴(SG)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수출 감소(9월 124억 3000만 달러, 12월 88억 6000만 달러)는 물량감소를 동반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국내 성장률이 2.6%에서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GDP 대비 경상수지도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 ◆제조업 활력 ↓, 부패, 정책실패...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신생률은 2006~2010년 연평균 18.1%에서 2011~2015년 14.9%로 떨어졌다. 신생률은 전체 활동 기업 중 새로 생긴 기업의 비율로,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시장에서 ‘새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기업에서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률 역시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하락했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연평균 25.0%로, 독일(53.8%)이나 미국(4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장균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퇴출이 용이해 산업의 변혁이 이뤄진다”며 “신진 기업은 즐고 기존

기업은 능력과 상관없이 생존을 지속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왜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제조업이 뒷걸음치는 것일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부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 보고서’는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 임금을 높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확대→내수 활성화→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이 늘면서 내수가 팽팽 얼어붙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韓美 실업률 역전... IMF 이후 처음

한국 4.0%... 미국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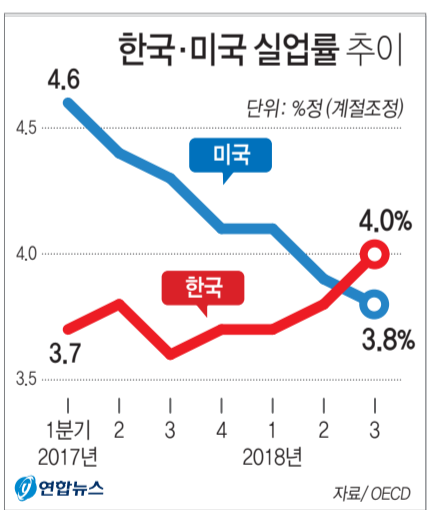
한국에는 고용 한파가, 미국에는 고용 혼풍이 계속되면서 한미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선진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실업률 역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전분기(3.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국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을 하회했다.

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4.6%, 미국은 4.2%였다.

/연합뉴스

## 한은 “브렉시트 부결, 시장 영향 제한적”

###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진호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이승현 국제국장, 이상형 금융시장국장, 김현기 공보관, 박광석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보험세를 보이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현지 시간) 정부가 EU와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승인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 차로 부결됐다.

/김희주 기자 h89@

## 국내 車 2300만대 돌파... 국민 2명당 車 1대

### 국토부 등록대수 5년간 감소세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된 국산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20만2555대로 전년 대비 3.0%(67만 4000대) 늘어났다. 인구 2.234명당 자동

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4년 3.7%,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등으로 2~4%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국토부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지원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도 개최한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지난해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역개발 성과평가를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